

인력충원 약속 계속 파기 과로사 해결 외면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관련 기사 12면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2면

팬데믹 이후
경제는 살아날까?

4~6면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7면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8~10면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11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12면

6월 19일
돌봄 노동자 총결기

2면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임재경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탓에 결혼 시기도 늦추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비혼 인구가 늘어난 것도 연관이 있다.

지난 10년간 계속된 경제 불황에 청년확장실업률(제값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25.6퍼센트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는 동안 20대 1인 가구의 주거 면적은 2008년 기준 34.8제곱미터에서 2018년 28.6제곱미터로 2평가량 줄어들었다(<한국의 사회동향 2020>, 정현주). 같은 기간 GDP는 약 1.0조 달러에서 약 1.72조 달러로 1.6배 성장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상당하다. 자가 비율은 20대 2.9퍼센트, 30대 10.7퍼센트인데 20대 청년 1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147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주거비로 월 소득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다(2021년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 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일반 가구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청년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 연령 중 가장 낮다. 청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 지역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2015년 기준 37.2퍼센트에 달해,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려 있음을 보여 준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청년들의 낮은 임금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대량으로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월 마감된 2021년 상반기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전국 1690호밖에 안 됐다.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은 고작 298호밖에 안 됐는데 지원자는 1만 7943명이었다.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겨우 1.6퍼센트이다!

그나마 있는 공공주택의 질도 문제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은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건설돼, 5평도 채 안 되는 비좁은 원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16년 말부터 3년간 공급된 공공주택 약 32만 8000호는 전세 보증금만 지원하는 전세임대(30.5퍼센트)이거나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19.8퍼센트),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한 행복주택(18.6퍼센트)이었다. 이들 모두 주거 기간이 짧아 주거 불안

정을 해결하기 어렵고, 분양을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무늬만 공공주택일 뿐이다.

공급 확대가 해법일까?

터무니없이 높아진 주택 가격 때문에 청년들에겐 시간이 지나도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 500만 호 중 260만 호는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로 투기 물량이 됐다. 반면에 한국의 자가소유율은 40~60퍼센트 사이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상당수 노동자들은 계속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2014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221만 원 이하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34.6퍼센트에 불과했다.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

로 찾아오는 불안정한 체제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이 위협받고 경제적 어려움 탓에 집을 팔기도 한다. 시장에 아무리 많은 주택이 풀린다 해도, 경제 위기와 빈곤이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을 소유한 노동자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 수 없다.

결국 주택 공급 확대를 몰부짚는 자들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자·대중의 주거 조건 개선이 아니라 건설 자본과 다주택자들의 이윤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지긋지긋한 주택난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소위 '자유로운 시장'에 내던져져 있고, 주택은 상품이 돼 이윤 논리에 의해서 시장에 공급된다.

또,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도시로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비좁고 불결한 주택이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생긴다. 자본주의의 '수요-공급 논리'가 합리적인

라고 말할 하지만, 그 실상은 이토록 비인간적이다.

따라서 주택을 부동산 시장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강력하게 매기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줄곧 이와 정반대로 행동해 왔다. 집권 내내 다주택자를 위해 엄청난 세제 혜택을 제공했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를 부추겨 왔다. 이런 부자를 위한 정책은 한동안 바뀌지 않거나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투기를 부추기는 시장 중심적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폭등시키고 LH 사태 같은 권력형 부패가 꿈광이처럼 끊임없이 자랄 토양을 만든다.

정부는 값싸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야 한다. 전쟁 위협을 높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형 무기에는 엄청난 돈을 퍼붓는 한국 정부는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 또,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주요 8개국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충당할 수도 있다.

능력이 충분하고 방법도 나와 있으니,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에 맞서서 투쟁을 통해 정부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 전투적인 노동운동의 영향 속에서 공공임대 주택 정책이 시작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가만히 둔 채 청년들의 주택 문제만 핀셋으로 뽑아내 해결할 순 없다. 미처버린 이윤 체제를 무너뜨릴 때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한 바 있다. 12월 2차 파업도 계획했으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지도부는

정부와 돌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월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학교돌봄터 사업') 안을 내놓으며,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밀어붙이고 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의 질을 낮추고 노동조건 개선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이 더 적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돌봄교실이 민간에 위탁될 공산도 커진다. 실제로 정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해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장하나,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면,

돌봄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돌봄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돌봄전담사 대부분을 시간제로 채웠다. 2020년 9월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국 초등돌봄전담사의 16.8퍼센트만 8시간 전일제이다. 전일제 비중이 2018년 18퍼센트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전담사들은 70여 가지 행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 시간 외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70여 가지 행정 업무를 '공짜 노동'으로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 확대 등 돌봄교실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책걸상이 있는 좁은 일반교실을 활용하는 돌봄 겸용교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조사를 보면, 2018년 25.3퍼센트 정도이던 겸용교실 비율이 2020년에는 40.6퍼센트로 늘어날 정도로 돌봄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렇게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쪼개 고용하고, 겸용교실 문제로 개선하

지 않는 상황은 교사들의 돌봄 업무도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학교돌봄터 사업은 공적 돌봄 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자체로 떠밀고, 민간위탁과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으로 때우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대로 시간제전담사를 상시전일제화 하고, 겸용교실 문제와 방역 가능한 돌봄교실로의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해야 공적 돌봄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교사를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돌봄 정책을 비판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률에 맞지 않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문재인식 검찰 개혁은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검찰이 선출된 정부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해하는 것이었다.

사실, 검찰은 전에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검찰이 권력의 간섭에 맞서겠다고 하는 것도 못 믿을 얘기이다.

검찰은 8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경영자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벌금 3~4조 원씩을 구형하고도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며 면죄부를 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의 연관 의혹이 큰데도 말이다. 정관계 로비 문건에 전 검찰총장 채동욱의 이름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과잉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조국 딸을 기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사실 웅동학원 채용비리가 불기소된 것은 대중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 이후 1년 반 동안 정권 측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다. '검찰 개혁'을 요란하게 앞세우면서 실제로 벌인 일들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다.

재·보선 직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겠다며 그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직 사퇴와 여당의 재·보선 참패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말이다.

부패가 문제다

박범계는 직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검찰 단속에 재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김오수의 검찰은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총장 임명 직후 이뤄진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박범계가 김오수를 무시했다는 소문이 나오더니, 검



무리수 정권 핵심부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의 무리수로 청-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찰 측에서 정권 핵심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애초 청와대는 임기 말 레임덕을 최소화하려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번 인사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대신 검찰 내 반발이 적은 김오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청와대는 검찰과의 갈등으로 상처를 입어 왔는데, 임기 말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면 이제 검찰을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달래고 중재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이번처럼 정권 핵심부가 무리수를 둘 때 김오수가 검찰의 이반을 대변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비록 김오수가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말이다.

결국 청-검 갈등의 지속은 검찰 단속의 필요 때문에, 즉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 할 필요 때문에 무리수를 계속 뒀야 하는 청와대의 사정에서 비롯한다. 부패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변명과 거짓을 가득 늘어놓은 회고

록 《조국의 시간》을 출판한 것은 여권에 불리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신과 부패, 내로남불 논란의 시발점이 바로 2019년 조국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국은 여권 핵심부에 '나를 밟고 가(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조국(청검 갈등)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은 자신의 아내 정경심이 구속된 재판에서도 정경심을 변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2019년 수사가 한창일 때는 재판에서 입을 열겠다고 했으면서 말이다.

마침 6월 8일에는 열린민주당 의원 최강욱이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행하고도 그것이 허위 아니라고 말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실형을 선고받았다.(벌금 100만 원이면 의원직 박탈인데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비례의원이라서 거짓말이 당선에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봐 준 것이다.)

이런 상황이나 8일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가 여당 지도부의 조국 사태 사과를 두고 잘한 일이라고 한 것이다(채

널A). 문재인 측근으로 간주되는 양정철은 이 시점에 책을 꼭 내야 했느냐며 조국을 책망했다(<동아일보>).

조국의 신간

결국 조국의 책이 출판되자마자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가 당이 조국을 감싼 것에 대해 부실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급기야 부패와 내로남불 비판이 확대될까 봐 8일에는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하라고 했다.

탈당 권유 대상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도 있고, 온갖 구설수에도 감싸줬던 윤미향도 있다. 이 중 다수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LH 사태 직후엔 국회의원 전수조사 운운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만하는 셈이다.

여권의 단합은 결국 차기 정권 창출 가능성이 있어야 유지된다. 그러나 조국의 신간은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 모두에게 불리한 일이다. 게다가 멀찌감치 앞서가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

으로 단결하기보다 나머지 후보들이 반이재명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그에 대한 지배계급의 반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재명의 포퓰리즘은 최근 들어 재계와 주류에 잘 보여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그 좌파성이 꽤 퇴색했는 데도 말이다.

이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흥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입당 가능성에 고무된 자들이 이준석에게 기대를 거는 듯하다. 이미지 세탁용 새 간판으로 말이다. 당내 중진들은 워낙 인기도 없고 지리멸렬하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은 당 리더십의 취약성에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준석의 언행을 보면, 영락없이 미숙한 애송이 우파 정치인이다.

정당 지지율 면에서 수년간 민주당이 앞서 왔는데, 지금은 국민의힘한테 꽤 차이가 나게 역전됐다. 이런 역전은 개혁 염원을 배신한 민주당에 대한 환멸과 분노 때문이다.

배신

이 모든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 내 이반(검찰)이 여전한 데다, 이제 심지어 대통령 측근 인사들끼리도 화합이 안 되고, 청와대 의사에도 따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레임덕에 빠진 전임 민주당 정부들이 늘 그랬듯이, 문재인도 위기 탈출을 위해 조금 더 기업인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대중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재용 사면 분위기 조성이나 8일 통과된 쌍용차 자구안 압박이 이런 경우들이다.

진보 개혁 염원 대중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다. 남은 일은 선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파와 중도파 모두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의 참을성 있는 구축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얀마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팬데믹 이후 경제는 살아날까?

다음은 5월 9일(현지 시각)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맑시즘 온라인 2021'에서 열린 같은 제목의 토론회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와 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인 조셉 추나라가 한 강연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녹취를 해 준 한가는 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반짝’ 회복인가, 지속적 회복인가, 누구의 회복인가?

마이클 로버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장기불황〉(연암서가) 저자

“팬데믹 이후 시장이 반등할까?”는 약간 당혹스런 물음이다. 어제[5월 7일] 밤이나 오늘 아침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다. 채권 시장도 계속 활황세이고, 금융자산 가격에 대체로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다.

사실, 애초에 추락한 적이 없으니 반등도 없었다. 금융 시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통제가 시작되던 2020년 3월 아주 잠깐 추락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회복됐고, 그 후 줄곧 상승세 일변도였다. 적어도 전 세계 주식 시장은 그랬다.

하지만 다른 보도를 보면, 미국 고용 시장은 정체한 듯하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서비스 부문 등이 다시 가동되면서 지난달까지 회복되던 일자리가 이제는 더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년 전 일자리가 없던 미국인 중 약 850만 명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이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쳐도 —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가 훨씬 심각한 세계 나머지 나라들은 고사하고 —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만큼 경제가 반등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까?

‘슈거 러시’[단것을 먹고 반짝 활기를 되찾는 것]인가 지속적 회복인가? 이것이 이 짧은 강연의 제목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할 만큼 지속성 있는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북반구에서 말이다. 물론, 다른 곳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며, 팬데믹도 분명 끝나지 않았다.

시장이 반등하는가? 주식 시장은 분명 반등했다. 미국 증시는 팬데믹 시작 직후 하락했지만, 이후 1년 반 동안 로켓처럼 치솟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은 은행·기업에게서 채권을 잔뜩 사들이고 이를 위해 돈을 찍어 냈다. 그렇게 해서 금융 체계 전반에 막대한 돈을 주입했다.

이 돈은 대부분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았다. 경제가 멈춘 탓도 있었지만, 은행이 그 돈을 잔뜩 쌓아 두고는 이 값싼 돈을 주식 시장 투기에 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프1을 보면 연준이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자 찍어 낸 돈이 늘어나자, 주가도 뒤편으로 오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해가 지나면서 금융 부문 투자량은 극적으로 늘었지만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 더 길게 보면 이 추세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미국 경제 규모 대

비 민간 부문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는 1980년대 초 약 2.5퍼센트에서 현재 약 6.5퍼센트로 올랐다. 이 수치는 특히 코로나19 슬럼프 때 수직 상승했다.

연준의 자금 투입과 금융 투기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현재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있다. 주식 투기꾼, 막대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금융 기관들 입장에서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을 것이다.

고도의 독점을 구가하는 소수의 IT 대기업들, 이른바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도 그럴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모두 팬데믹 동안 이윤이 크게 늘었다.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배달하면서 수익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주식 시장이 크게 확장하고, 시장이 반등했으며, 미국 기술 부문 대기업들이 팬데믹 동안 엄청난 실적을 냈다.

그 결과, 미국 최고 400대 부자의 부는 크게 늘었다.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15퍼센트에 이르는 부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은 이제 GDP의 2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은 추락한 적이 없다. 세

계 최대 자본주의 경제국의 극소수 엘리트의 부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나머지 세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나머지 사람들의 수입, 생산, 고용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IMF에 따르면, 2020년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평시 경기 수축”이 벌어진 해다. 산출, 고용,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악화했다. 1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2021년 1인당 소득이 2019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이 되도 그런 나라는 약 110개국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의 생계, 노동 조건, 어떤 수준으로든 생활 수준을 유지할 능력과 관련해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자원들, 즉 산출량의 누적 손실은 2020~2025년 동안 약 2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GDP의 20퍼센트가 넘는 양이다. IMF 추산에 따르면 2020~2022년 1인당 소득은 팬데믹 슬럼프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해, 선진국에서 12퍼센트, 중국을 제외한 신흥공업국에서는 최대 20퍼센트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금융 시장은 잘 나갔고 극소수 엘리트도 잘 나갔지만 전 세계 압도 다수 대중은 코로나19 슬럼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슬럼프

경기 회복이 오고 있다. 그러나 유지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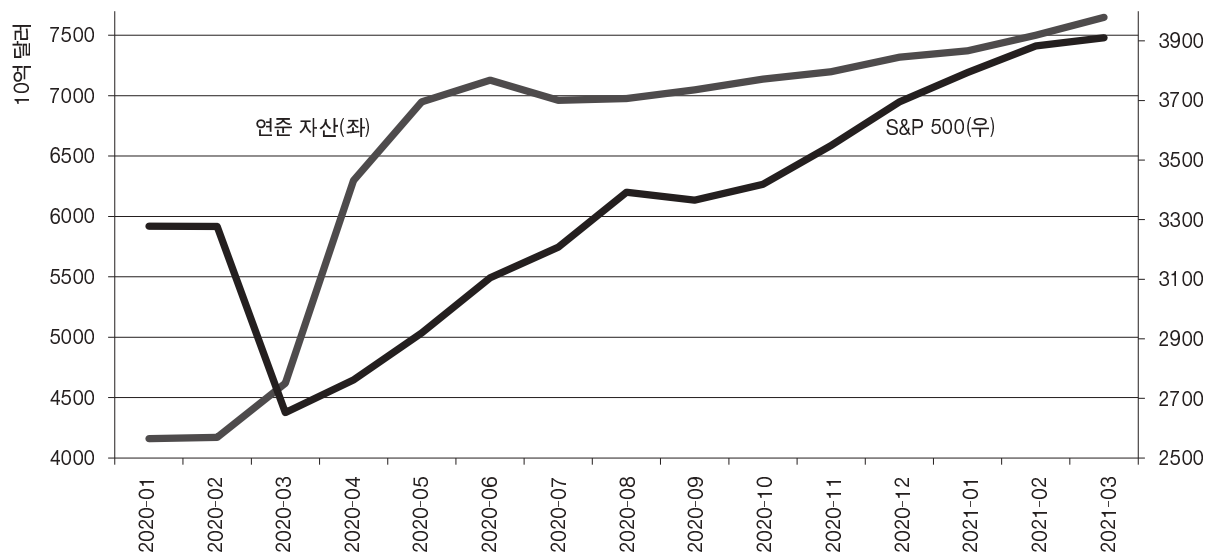
상황을 간단히 훑어보면, 미국은 꽤 빠르게 회복하는 듯하고, 중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아등바등하고 있고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 같다. 인도는 팬데믹이 심각해 중국처럼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정부 지출과 조치 등으로 다른 나라보다 경제를 더 활성화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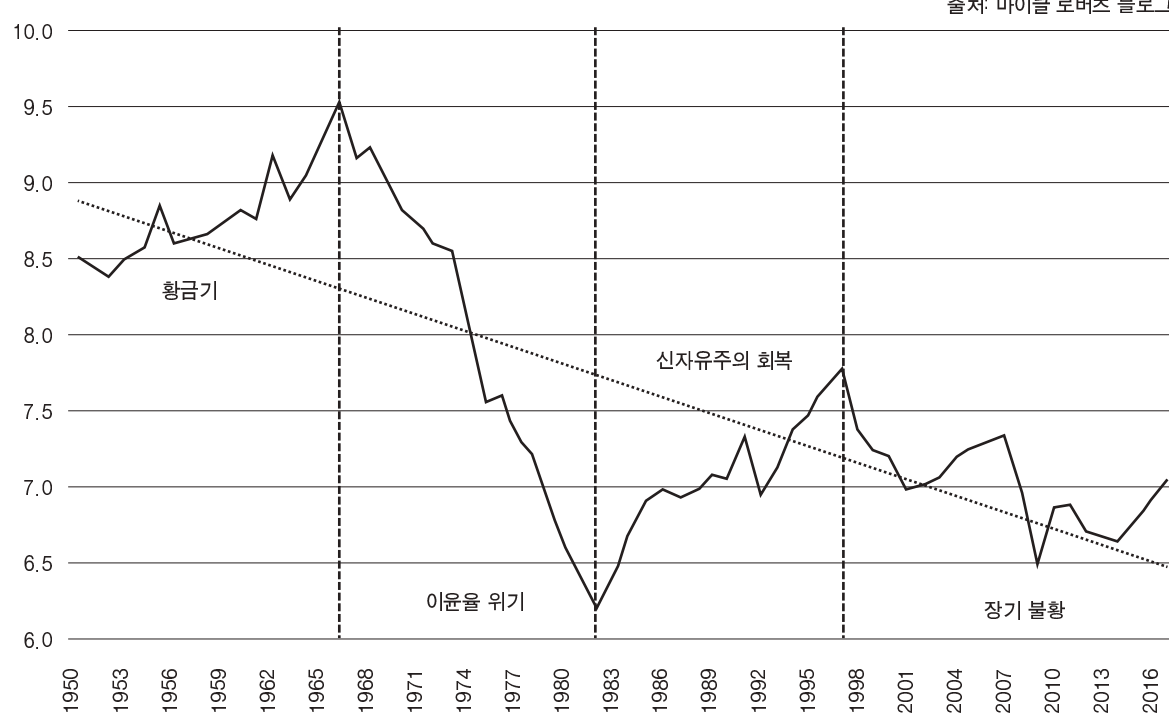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첫째, 민간 부문의 이윤율이 여전히 매우 낮다. 그래프2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민간 부문 이윤율을 측정한 것이다. 민간 부문 이윤율은 이미 팬데믹 직전에 역대 최악에 근접했다. 현재 이 수치는 1960년대의 높은 수준이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회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래프1 연준 자산과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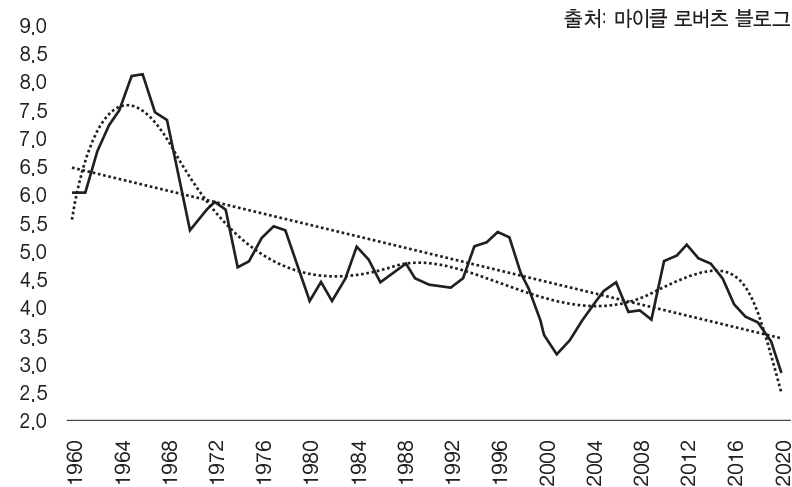
그래프2 G20 국가의 이윤율(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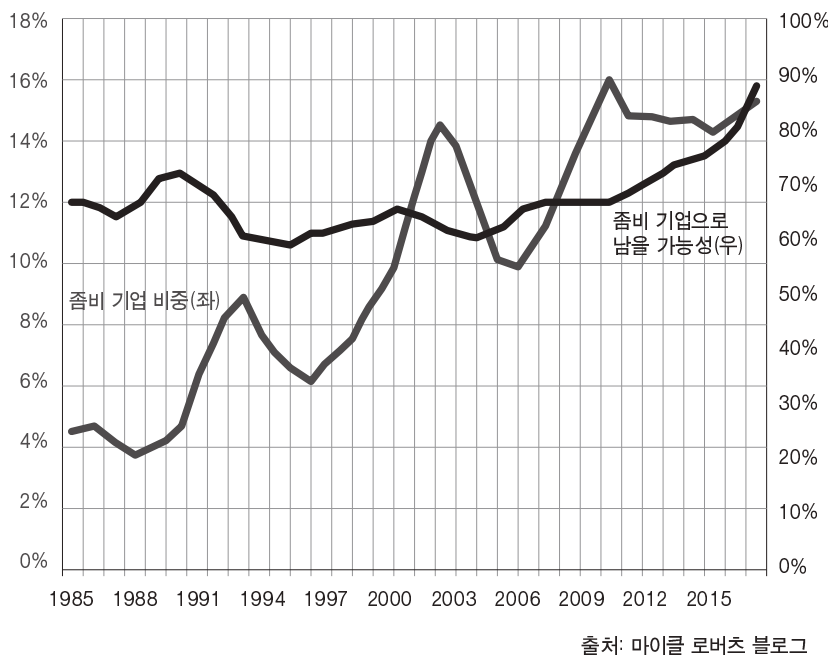
출처: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그래프3 미국 비금융 부문 이윤율(연준 추정치로 계산, 단위: 퍼센트)



그래프4 늘어나는 좀비 기업



때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프3은 미국의 비금융 부문 이윤율이 역사적으로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였음을 보여 준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역대 최악으로 낮아졌다. 매우 빠른 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려면 이윤율이 가파르게 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윤율은 매우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려면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부채가 많은 부실 기업들이 청산돼야 한다. 체제를 정리하고 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살아남은 더 건실한 기업들이 시장 지분을 늘리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창조적 파괴’를 거쳐 자본주의는 다시 성장할 조건을 만들어 낸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이 여전히 지고 있는 부채 수준을 보라. 지난 150년 동안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 역시 기록적 수준이다.

동시에,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지에는 수익을 못 내서 이윤도 못 남기고 이자만 겨우 감당하는 기업들이 수도룩하다. 이런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15~20퍼센트에 이른다(그래프4). 이들은 근근이 버티며 일정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는 있지만 진정한 투자는 못 하고 운영 비용

만 충당하고 있다. 그게 전부고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 그런 처지다.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올해 투자 수준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다. 경제가 재가동되더라도 민간 부문이 실제로 활기를 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IMF는 선진국 경제 전반의 낮은 GDP 대비 투자 수준이 2022년에도 별로 오르지 않을 것(22.4퍼센트)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지금의 회복세는 창조적 파괴, 즉 자본주의 경제를 202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조건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주요 경제에서 이윤율은 여전히 심각하게 하락하는 추세다. 생산력을 키워 경제를 성장시키는 능력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서비스 산업 등에서 고용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해도 자본주의가 새로 활기를 얻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 찾아온 ‘광란의 20년대’ 같은 대호황이 온다고 기대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다른 모든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는 정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즉, 낮은 성장률, 낮은 물가상승률, 더딘 고용 증가, 낮은 임금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직전 상황과 진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삼중 위기와 자본주의의 장기적 변화

조셉 추나라 영국의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로버츠의 지적처럼 경제가 반등하기는 할 것이다. GDP 성장률도 기록적인 수준일 것이다. 지난해 경기 후퇴가 매우 급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 호황은 없을 것이며, 느리고 취약한 성장이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립된 패턴이 재개될 것이다.

나는 이에 더해 팬데믹 그 자체와 자본주의의 장기적 변화를 다루고, 현재 바이든이 벌이고 있는 일에 관해 짧게 덧붙이겠다.

유기적 위기

그러나 그 전에 위기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자. 이번 위기는 이전과는 다른 매우 놀라운 위기다. 나는 이를 “3중 위기”라고 했다. 이것을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 위기와 팬데믹 위기 자체가 가한 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유기적 위기”에 관해 말한 바 있다. “유기적 위기”란 정치·경제 등 [체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심대한 체계적 위기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위기는 유기적 위기이지만, 팬데믹이 우리의 신체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위기는 유기적이다. 팬데믹은 자본주의 체제가 굴러가는 데 필수적인 노동을 만들어 내는 조건에 타격을 입힌다. 주류 경제학은 완전히 무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바다.

스스로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에 능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시장·착취 등이 자연스럽고, 영원하고, 불가피한 현실처럼 보이게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체제를 굴러가게 하는 인간 노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실제 자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자연을 대상으로 노동을 해 인류가 종으로서 생존하는 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상품화하고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한에서만 자연에 관심을 보인다.

이 점이 코로나19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다른 모든 주요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마치 아무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타격한 외부 요인처럼 취급됐다. 이는 물론 터무니없는 관점이다.

코로나19는 자본주의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갖는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대부분의 주요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자연에서 인수감염

을 통해 건너왔는데, 자본주의가 자연에 침투하고 자연을 재편하고 자연의 여러 측면들을 상품화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여기에는 이미 전례가 있다. 몇 년 전 기니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유행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에 투자가 몰린 것이었다. 에볼라바이러스의 숙주인 과일박쥐가 서식지인 숲에서 밀려나 플랜테이션 등지에서 인간·가축과 접촉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 마이크 데이비스와 마르크스주의 역학자 롭 윌러스 등은 몇 년 동안 공장식 축산업으로 독감 팬데믹이 발발할 위험성을 경고해 왔고, 어떤 시점이 되자 자본주의적 공장식 축산 기법의 결과로 독감 팬데믹이 상당한 피해를 낳았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해 사람들은 팬데믹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태·경제·사회적 요소가 모두 결합된 위기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재앙적 기후 변화도 그런 요소의 하나일 것이며, 이 또한 이윤 추구와 축적 때문에 벌어진 재앙이며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과 문제를 더 첨예하게 만들 것이다.

끝나지 않는 팬데믹

둘째,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같은 자들의 안이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 몇 달 전만 해도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같은 자들이 팬데믹을 극복했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서 심화하고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3차 물결 속에 있다.

이렇게 팬데믹 물결이 거듭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이윤 창출을 지속하는 데 목을 맨 트럼프와 존슨 같은 정치인들의 결정 때문이다. 이들은 “시체가 쌓이게 내버려 두자” 하는 태세였다.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이 그러더니 이제는 브라질과 인도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배양 접시가 됐다. 그러다 새 변종이 생겨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세계로 퍼져 또다시 감염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돌아온 감염 물결이 유럽 대륙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속되고 있던 회복 과정을 질식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달 내 바이러스가 돌아올 실질적 위험이 있다.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 변종 B.1.617.2가 있다. 이 변종은 영국의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전반적인 상황에 비춰 보면 매우 규모는 작지만, 이미 기존 변종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백신이 듣지 않는 변종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새로 가동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규모로 보면 엄청난 재앙일 수 있다. 인도·브라질의 현 상황, 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인도 외]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질 공산이 큰 일들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

그러므로, 팬데믹이 수그러들고 있고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슬로건처럼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장기적 추세

셋째 논점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이 최근 몇 주에서 몇 달새 한 발표들은 좌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도 꽤나 놀라게 했다. 1.5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겠다), 글로벌 법인세 제안(이는 로버츠가 말한 FAANG 등의 이윤 일부에 타격을 줄 것이다), 백신 특허권 유예 제안,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발표 등등.

현재 미국에서 추진되는 이런 조치들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는 사실 트럼프가 했던 것을 되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 그 사례다. 트럼프는 미국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시켰고 그 자신이 기후 위기 부인론자였다.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온전한 복지 체제를 도입하거나 복지를 일부라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봐야 한다. 바이든이 제안한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복지는 상당수 유럽 나라보다 훨씬 열악하다.

어떤 조치들은 기껏해야 유럽 주류 정치 수준에 가까워지는 정도다. 예컨대 바이든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는, 내가 알기로 영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들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들은 초기 신자유주의 수사를 퍼던 미국이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한다. 첫째, 국제적 수준의 제국주의 갈등,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제2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중국 내 자본 — 더 일반적으로는 중국 자본 — 에 득이 되도록 그들을 조직하는 데서 국가가 핵심적 구실을 하는 경제가 부상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국가가 자기 힘을 이용해 중국 자본가의 이익



사진 출처: Anastasya Eliseeva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은 적다

을 증진한다.

지금 미국은 이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 자본을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조직해야 한다고 느끼는 듯하다. 물론, 미국 국가는 지금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지만, 바이든 하에서는 이것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이든이 제시하는 많은 조처들은 미국 자본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법인세의 경우 FAANG에 해당하는 첨단기술 대기업들을 조세 체계 등을 이용해 미국 국가와 더 강력하게 묶어 두려는 것이다.

둘째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장기적 위기 판리를 위한 실용적 변화라는 점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적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전후 시기에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1980년대 초부터는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는 것이다. 로버츠가 제시한 미국의 이윤율 추산도 보라(그래프3).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윤율이 낮게 유지되면 비교적 미약한 성장세에 뒤이어 위기가 거듭 벌어진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나타난 또 다른 추세는 기업 규모가 작아지던 신자유주의 초기의 짧은 시기 이후, 아마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 규모가 커져 왔다는 것이다. 최근 20~30년 사이 기업 규모는 급격히 커졌고, 소매·금융·첨단 기술 기업들이 이를 선도해 왔다.

이런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마불사(大馬不死) 체제가 형성됐다. 이는 국가가 실패한 자본주의를 직접 구제하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정부의 부양책 규모는 매 위기마다 커졌다. 2001년 미국에서 경기가 후퇴하자 미국 정부는 GDP의 4퍼센트를 써서 경제를 살렸다. 2008~2009년 위기 때는 13퍼센트를 썼고, 이번 위기 때는 20~25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가가 직접 지출하는 것뿐 아니라 금융화한 구제도 늘어났다. 거슬러 올

라가 보면 2001년 경기 후퇴 때 연준은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이는 주택 거품을 키워 2008~2009년 위기로 이어졌는데 이 위기 때도 연준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마치 저금리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는 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기도 하고, 금리가 낮지 않으면 확장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에 더해, 양적완화 정책이 있다. 2008년에 각국 중앙은행이 폄던 양적완화는 이번에 훨씬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들이고 마이클 로버츠가 말한 자산 거품을 키우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 경제가 굴러가게 위해 국가와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패턴이 급진화하고 있다.

좀비 자본주의

이런 개입이 효과가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개입이 그저 수익성 없는 수많은 투자, 즉 수많은 좀비 기업들의 생명만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좀비 기업의 증가 외에도 파산율을 보면, 이번 위기는 파산율이 하락한 최초의 위기다. 직원을 전부 무급 휴직시키고, 국가에게서 지원금을 받고,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계속 굴리면 되는데 뭐하러 기업을 도산시킬 것인가?

그런데 이러면 수익성 낮은 투자가 정리되지 않고, 부채 부담이 체제 전반에 쌓이게 된다.

요컨대,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 것이다. 경기가 침체하고, 좀비 기업이 양산되고, 자산 거품이 일고, 금융이 불안정해지고, 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이 노동자들을 더하층 쥐어짜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진정한 대안은 고삐 풀린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필요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편의 투쟁뿐이다.

번역 김준호 녹취 한가은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정선영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퍼센트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5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6퍼센트로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수치들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지난해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퍼센트에 그쳤던 것이다. 결국 지난해와 올해를 평균 내면 5월 물가는 매년 1퍼센트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려면, 경제 성장세가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 수준이 크게 높아야 한다.

그러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경제가 진정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대, 미국의 고용이 회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직전보다 총 노동자 수가 760만 명 줄어든 상태다. 5월 미국의 신규 고용은 2년 전보다 3.8퍼센트 감소했다.

중국 경제도 투자 성장세가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대비 올해의 평균 투자 성장률은 3월에 2.9퍼센

트, 4월에 3.9퍼센트로 과거보다 한참 낮다. 거품과 연계된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프라와 제조업의 투자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도 지난 몇 달간 수출이 회복되고 불균등한 회복 속에 일부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했다지만, 기업들의 이윤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비율은 31퍼센트에서 34.5퍼센트로 늘었다.

고용과 소득에서 확연한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취업자가 늘어도 대부분 단시간·임시 일자리다. 또 구직단념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서 장기 실업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IT 등 일부 산업에서 임금이 인상된 곳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소득 회복세는 더디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 평균 근로 소득은 지난해보다 1.3퍼센트 줄어들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화폐적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생산 과정, 특히

자본 축적의 활성화와 연계돼 있다. 이에 비춰 현 경제 상태를 보면, 투자가 극적으로 늘지 않는 한, 순전히 재정 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반적인 물가 인상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과 기업주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은 현재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펼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 정책은 부채 기반 소비(투기 포함)를 대폭 늘려왔다. 앞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금리를 서둘러 인상했다가는 심각하게 부풀어 있는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불완전한 회복 국면이라 할지라도 물가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상승시켜서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투쟁은 확산될 수 있다. 기업주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장된 공포에는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



사진 출처: 김준호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지만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금융 거품만 키우고 있다

화폐수량설은 잘못된 이론

최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화폐수량설이 있다. 화폐수량설은 물가 상승률이 시중에 풀린 통화량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화폐수량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프리드먼은 정부 지출의 확대는 경제 회복이 아닌 물가 상승률을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임금과 복지를 축소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됐다.

화폐수량설에 바탕을 둔 인플레이션 예측은 반복돼 왔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공황 때에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펼치

며 통화를 대규모로 공급하자,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률 2퍼센트를 목표로 삼았지만, 수년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용통화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물가도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윤율은 낮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율도 낮았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중에 돈을 공급해도 이것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물가 상승도 미미했다. 예컨대 한국의 통화승수(중앙은행이 푼 돈의 회전 속도)는 갈수록 줄어 2008년 26.89였지만 올해 2월 14.4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돈을 풀어도 돌지 않고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매우 큰 것이다.

마르크스와 케인스가 주장했듯이 중요한 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이다. 그리고 화폐 수요는 이윤율과 기업의 투자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당분간 물가가 크게 오르기 어려운 까닭이다.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김영익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펜 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 노선을 표방하며 미국의 기존 동맹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선 때부터 바이든은 동맹 ‘복구’를 대외 정책의 주요 목표로 천명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들과 파리기후협약 등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정부의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구’ 노선은 트럼프 정부와 다른 특징으로 꼽힌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바이든 취임 100일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내 문제가 산적하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굳건한 세계적 리더십을 복구하려고 큰 걸음을 내디뎠다. … 그러나 커다란 시험이 여전히 앞에 있다.”

주류 국제관계학자인 존 아이젠베리의 지적대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은 1945년 이래 미국 엘리트들이 고수해 온 (그러나 트럼프 정부 때는 다소 흔들린) 신조를 재천명한 것일 수 있다. “국제 질서를 건설하고 주도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동맹과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힘을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다.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주요 지역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갉아먹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전을 동맹의 결집과 확대로 누르겠다는 의도다. 주요 국제기구들을 주도하고 많은 동맹국들을 확보했다는 점은 중국 등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미국의 강점이다.

트럼프는 나토(NATO)를 가리켜 “한물갔다”고 무시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나토와 대서양 동맹의 의의를 강조하며 유럽 동맹국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쿼드(Quad)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를 다 합치면 중국 등을 압도하고도 남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국제 질서를 유리하게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은 바이든의 대외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권위주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쿼드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지금까지 몇몇 외교 무대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



바이든은 G7 같은 국제기구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맞선 단결을 강조한다. 지난 5월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다. 3월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는 코로나19 백신 생산·공급 확대부터 핵심 기술 워킹그룹 구성 등 여러 현안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5월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는 대만의 세계보건총회 참석 지지를 포함해 중국·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미국 엘리트들은 세계적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이 첫발을 잘 뒀다고 대체로 만족하는 듯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앞에는 만만찮은 모순과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제 질서는 미국에 가장 유리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은 그 유지 비용을 감당하고 동맹들의 이익을 위해 일정 양보도 감수했다. 미국이 자국 주도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관리하려면 그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역량이 만만찮게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제국주의의 역량은 전성기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미국 엘리트들은 미국 경제의 상대적 지위 하락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패배 등 여러 지정학적 실패를 겪었다.

경제 위기도 문제다. 경제 위기는 국가들의 불협화음을 키우고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든다.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과의 경제 갈등에서 단호하다. 그래서 첨단 기술과 몇몇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서방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그런 중국을 상대

로 바이든 정부는 극심한 경쟁을 각오하라고 위협하며 동맹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미국-유럽 동맹의 상황을 보면, 바이든 정부의 ‘동맹 복구’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광범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6월 6일 〈워싱턴 포스트〉기고문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며,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대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 등이 아니라 이 국가들이 무역과 기술에 관한 규칙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유럽 강대국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탈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싫고, 중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프랑스·영국 등의 군함들은 흑해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한다.

그러나 중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러시아가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도 많다.

그래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을 강

하게 비난하지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독일의 촉구로,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타결했는데, 이는 타결을 잠시 늦춰 달라는 바이든 측의 요청을 무시한 결정이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제재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 지연되자 메르켈은 “우리[미국과 독일]의 이해가 늘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노선에 반발해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유럽 자체의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마크롱은 여전히 유럽 스스로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EU 탈퇴로 프랑스가 EU 안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의 행동을 자국 전략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G7 외교·개발장관회의의 공동성명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성명의 수위를 조절하라고 요구해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미국의 바람대로 100퍼센트 관철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쿼드의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 인사들은 공식적으로 쿼드가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바이든 정부가 쿼드를 반중국 군사 동맹으로 규정하면 한국을 비롯한 많

은 아시아 국가들이 쿼드와의 협력을 주저할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동맹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의 이익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 국가들이 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끝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상업, 환경, 지적재산권, 기술에 관한 기본 규칙을 보호하고 강화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동맹국들을 최대한 중국을 견제·봉쇄하려는 자신의 전략적 목표로 끌어들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들을 압박해서라도 말이다.

바이든의 이런 시도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중국·러시아 등의 반작용을 부를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지정학적 불안정을 더욱 키울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말이다.

배터리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한국 지배자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의식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협력분야로 정한 배터리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미국도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한국은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

한국의 재벌들도 한미동맹을 우선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은 꺼린다. 얼마 전 SK가 세운 최첨단연구소가 낸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과 ‘디커플링’ 시도가 심화될수록 한국 지배자들의 딜레마는 더 깊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미국에 협력할수록 대외 정책의 모순은 커질 것이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넣는 데 동의하자, 6월 6일 미국은 대만에 지원하는 백신을 실은 군용기를 한국의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이륙시켰다. 이런 일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정학적 갈등에 더 깊이 휘말려 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차승일

이 글은 6월 4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회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이다.

파시즘의 독특함

본론에 앞서 다른 종류의 극우와 구별되는 파시즘의 독특함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만큼 개념에 혼란이 많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극우의 일종이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특수한 종류의 극우로 중하층 중간계급에 기반한 반동적 대중 운동이다.

첫째, 파시즘 운동은 통상의 극우와 사회적 기반 면에서 차이가 있다. 파시즘은 중간계급을, 즉 영세 상공인이거나 전문직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다. 이런 사회적 기반 때문에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는 극도로 모순된다.

둘째, 실천과 사회적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군부독재를 제외하면) 여

느 극우 정치인들이 의회제 안에서 극우 정책 채택을 목표로 한다면, 파시즘은 의회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을 모조리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시즘은 이를 통해 노동계급을 원자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셋째, 형태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극우 정치인들은 우파 엘리트 정당을 통해 활동하고 우익 군사 쿠데타의 경우에도 군 장성들만이 관여하는(사병을 명령으로 동원하는) 것과는 달리 파시즘은 집권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반동적 대중 운동이다. 파시스트 지도자도 그런 운동에서 생겨난다.



사진 출처: Tyler Marlow/출판사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는 떠났지만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의 궤적

국제 정치에서 극우 부상의 위험이 일대 경각을 가져 온 최근 사례는 2010년대 초중반에 있었다. 2011년 노르웨이에서 파시스트 아네르스 브레이비크가 폭탄 공격과 총기 난사로 70여 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오늘날 극우와 파시즘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경제 위기다.

2008년 금융 공황은 그전 수십 년 동안 득세해 온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보여 줬는데, 각국 지배자들은 막대한 돈을 퍼부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과 기업들은 살리고 그 대가를 서민과 노동계급에게 떠넘겼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와 경제 위기로 평범한 사람들은 삶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었는데, 각국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적 긴축을 추진했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배계급은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공식정치를 지배하도록 하며 정치 안정을 누리려 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누가 집권하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며 노동계급을 공격해 중도파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쳤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이 커졌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처럼 대자본자들과 지배계급의 상당수가 바라지 않는 정치적 이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벌어졌다.

이 광범한 불만과 분노는 2008년 위기 이후 처음에는 극우보다는 좌파적 저항으로 이어졌다.(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 운동과 포데모스의 탄생, 그리스 총파업 물결과 시리자의 집권, 미국 버니 샌더스의 인기)

2011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 중동 전역으로 확산했다. 중동의 독재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동의 대중 반란 열기는 서구로 수출돼, 스페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의(이집트 혁명처럼) 광장 점거 운동이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점거하라’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스페인 운동은 얼

마 뒤 포데모스라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으로 이어졌다.

경제 위기의 타격이 특히 심각했던 그리스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파업 물결이 일어났다. 대중적 투쟁이 촉발한 좌경화로 지지율이 3퍼센트 정도 이던 좌파 정당 시리자가 급부상했다. 2015년에 마침내 집권했다. 영국에서는 2015년 9월에 제러미 코빈이 모두의 예산을 깨고 노동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그 직후에 미국에선 버니 샌더스가 부상했다. 그 즈음 한 조사에서 미국 청년들의 절반가량이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각각 차이도 있지만, 각자의 나라에

서 좌파적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시리자, 포데모스, 코빈 그리고 샌더스(는 좌파적 개혁주의라고 부를 수 없지만 말이다) 등이 부상한 것은 당시 전 세계 좌파를 고무했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스의 시리자는 집권 6개월 만에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지배자들에게 굴복했다.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는 정부가 된 것이다. 결국 우파에게 정권을 내줬다.

극우와 파시즘이 주류 중도 정치와 개혁주의의 배신이 야기한 환멸을 교활하게 이용하여 성장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파시즘 정당들이 득표율을 크게 끌어올리며 약진하기 시작했고, 몇몇 나라에서는 정부에 입각하기도 했다.

나라마다 구체적 양상은 다르지만, 10년의 궤적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위기의 발생 → 중도 좌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긴축 추진 → 저항과 반란의 분출 → 정치적 급진화와 양극화 → 좌파 개혁주의가 성장하거나 우파가 집권하던 곳에서는 중도좌파가 반사이익을 얻음 → 운동의 패배, 좌파 개혁주의나 중도좌파의 실패(또는 배신) → 극우와 파시즘의 성장.

정치적 양극화

그럼에도 극우와 파시즘의 성장은 사회 전반의 우경화를 뜻하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로 봐야 할 듯하다. 좌파적 개혁주의 세력이 떠올랐다가 가

라앉고 극우가 이를 이용해 성장하는 와중에도 수단 항쟁, 홍콩 민주 항쟁, 칠레 시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미얀마 쿠데타 반대 투쟁, 팔레스타인 저항 등 꽤 강력한 저항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경험이 유용할 듯하다. 2009~2010년 프랑스에서는 수백만 명 규모의 총파업 등 우파 정부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그 여파로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이 17년 만에 집권했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이라는 혁명적 좌파가 중심이 돼 창당한 반자본주의신당(NPA)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사회당 정부는 긴축을 추진하며 실망을 줬고, 2017년 대선에서는 겨우 6퍼센트를 득표하며 5위로 주저앉았다. 바로 이 대선에서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이 100만 표를 득표했다.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파 정치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도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노란 조끼 운동과 노동자 파업 등 저항이 계속됐다. 이 고비를 넘기고 마크롱 정부가 경찰력과 보안법 강화 등 권위주의적 조치를 강화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4월 퇴역 장성 등 극우는 정부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쿠데타를 벌일 수 있다고 위협했고, 파시스트 마린 르펜은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EU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거와 악수하는 치프라스 그리스 시리자 당대표



사진 출처 Alan Santos/블리커



사진 출처 Yannis Youlounas

위 : 트럼프와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
아래 : 쓰레기통을 뒤지는 빈민. 경제 침체는 파시스트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이 된다

중도의 귀환?

2020년에는 중도파가 다시 힘을 얻는 듯한 형국이 펼쳐졌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노란 조끼 운동과 노동자 파업을 가까스로 넘겼다. 이탈리아에서는 연립정부가 무너지고 유럽 각국에서 긴축을 강요한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였던 자가 총리가 됐다. 영국의 코빈은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영국 노동당은 다시 우경화했다. 스페인 포데모스는 바로 몇 년 전에는 특권층(정치 카스트)이라고 지목했던 중도좌파와 사회당과 연립정부를 맺었다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바이든의 경제 부양책 발표 등과 함께 경제 사정도 나아지는 듯하고 백신도 보급되면서, 중도로의 귀환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관측은 근시안적이다.

첫째, 좀더 진중한 분석들을 보면, 그런 회복은 일시적이고 취약하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항구적 재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상대적 힘이 줄어들면서 중국과의 경쟁과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는 주로 정부들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팬데믹 위기로 더욱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적 위기도 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그 심각성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근시안

둘째, 1월 6일 극우가 미국 의사당을 점거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은 자본주의의 중심지에서 극우와 파시즘이 만만찮게 성장하고 있음을 충격적으로 보여 줬다.

셋째, 미국 바이든은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고 백신 공급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트럼프와 차이가 있지만, 중국과

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데서는 마찬가지다. 즉, 극우 성장의 토양이 되는 체제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 주면서,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더 자극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약속받았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 억압과 차별, 권위주의적 조치가 강화됐다. 이는 극우의 성장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섯째, 고전적 파시즘이 성장했던 1920년대와 1930년대에도 경제가 계속 곤두박질만 친 것은 아니다. 등락이 있었고, 파시즘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근저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아만으로 이어졌다.

단기적 시각으로 헛된 희망을 품으며 중도의 귀환에 기대를 걸 게 아니다. 더 긴 시야와 냉정한 분석으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극우의 특징: 고전적 파시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경제의 장기 침체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극우의 성장은 세계적 현상이 됐다. 미국 트럼프, 프랑스 마린 르펜, 독일을위한대안당, 이탈리아 오성운동과 북부동맹, 인도국민당, 필리핀 두테르테, 브라질 보우소나루 등.

2016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극우의 성장이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줬다. 이듬해인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이 1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며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같은 해 독일 총선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창당 4년 만에 3위를 차지하면서 연방의회 의석 709석 중 90석 이상을 차지했다. 독일을위한대안당 안에는 파시스트 분파가 만만찮게 존재한다. 2018년 이탈리아에서는 우파적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주도하고 지독한 이민 반대 정당인 북부동맹이 포함된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2014년 인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이 승리했다. 인도국민당은 국민자원군(RSS)이라고 하는 파시스트 조직을 포함한 극우 정당이다. 2016년 필리핀 대선에서는 두테르테가 승리했다. 두테르테는 집권하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천 명을 살해했다. 2018년 브라질 대선에서는 극우 정치인 보우소나루가 당선됐다.

이들은 기성 중도파 정치인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헌신을 비난하면서

대중의 불만을 우파적으로 흡수하고 공식정치의 지형을 더 우경화시켰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초중반에 난민 위기가 심각해졌다. 서구 강대국과 그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아랍 혁명에 반혁명적으로 개입했다. 여기에 다시 힘을 키우고 있던 러시아와 중동 지역의 강국들도 끼어들면서, 특히 시리아에서 일어난 혁명은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졌다. 강대국들은 매우 반동적인 세력이었던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아이시스)를 핑계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아이시스 같은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낳은 부산물이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난민이 대거 발생했고, 이들이 유럽으로 향하면서 난민 위기가 발생했다. 유럽의 지배자들은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 때 서구 사회에서 굳어진 이슬람혐오를 더욱 부추기면서 난민을 배척했다. 여기에는 2008년 경제 위기의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분열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인종차별이 강해졌는데, 유럽의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이슬람혐오적 인종차별을 더욱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것은 다시 지배자들의 인종차별 선동을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트럼프는 중남미에서 오는 난민을 막으려고 장벽을 세우고 극우 자경단을 부추겼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는 극심한 위기에 빠졌고 그로 말미암아 기성 정치인들은 불신받고 있다. 인상적인 운동과 반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계급투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좌파의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이런 조건을 활용해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

이 점들은 고전적 파시즘이 성공했던 때와 오늘날 극우 성장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보여 준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그 때문에 생겨난 대중적 울분과 좌절감을 먹고 자라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또, 그렇게 자라면서 공식 정치의 지형을 더욱 오른쪽으로 옮기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계급투쟁

그러나 1920~1930년대와 달리 지금은 계급투쟁이 강력하지 않고, 그래서 좌파 일반과 혁명적 좌파가 약한 상황에서 극우가 성장한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노동계급의 저항과 혁명 그리고 좌파에 반대하는 반(反)혁명적 요소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선전에서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이것이 둘째 차이점이다.

1920~1930년대에는 제1차세계대전과 노동자 혁명 물결을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제2차세계대전으로 향하는 시기였으므로, 고전적 파시즘은 노동계급 운동과 좌파에 맞서는 성격이 강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특히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인종차별, 그중에서도 이슬람혐오를 핵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고전적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와 목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셋째 차이점은 오늘날 극우와 파시즘 세력들 사이에서는 그 선조들과 비교해 선거에 출마해 지지를 얻는 방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물론 히틀러도 ‘우리는 선거로 집권한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치당은 수십만 명 규모의 돌격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숨기지 않았고 그 힘을 거리에서 사용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 당시는 제1차세계대전과 뒤이은 혁명 물결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여러 나라에서 정치 폭력이 난무했다. 특히 참전 경험 때문에 폭력 사용이 익숙한 인

자들이 많았다. 고전적 파시즘 운동은 바로 그런 인자들에서 초기 간부를 구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장기호황을 겪으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더 안정하고 발전했던 경험이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선거 대응을 더 중시하는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끝이곧대로만 보면, 이들의 본성에 가림막을 쳐주는 것이다. 선거 득표를 올리고 그 덕에 영향력도 커지는 것도 위험하고, 위기 상황에서 극우와 파시즘의 정치가 선거 정치보다 더 극우화할 가능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오늘날의 파시스트들도 대체로는 이런저런 폭력 조직들을 갖고 있다.

넷째 차이점은 오늘날의 극우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서 수혜를 입고 있지만 뚜렷한 경제 대안이



사진 출처 Ernest Morales/블리커

프랑스 국민전선의 당수 마린 르펜. 오늘날의 파시스트들은 (아직) 선거를 적극 활용하려 한다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자본주의 생산이 상당히 국제화돼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물론 유럽의 국우는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론을 주장하고, 미국의 트럼프는 주로는 중국과, 그리고 심지어는 동맹들과도 관세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 외에는 불신받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무솔리니는 집권 후 국가자본주의로 선회했고, 히틀러도 그렇게 했다. 그 과정에서 히틀러는 자신을 오랫동안 후원했던 기업을 몰수해서 국유화해 버리기도 했다.

셋째 차이점과 넷째 차이점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류 우파와 극우, 파시즘 간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흐려 보인다.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거리를 두려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나 주류 우파의 우선회가 극우·파시즘에게 성장의 토양을 제공하는 식의 상호작용, 극우·파시즘의 지도자들과 기층운동의 상호작용은 진정한 파시즘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파시스트가 아닌데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극우와 파시스트를 한껏 고무한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의 백인 하층 노동계급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와 달리 미국의 대자본가들과는 관계가 겉끄러웠

다. 감세 등으로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말이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 마이크 데이비스는 트럼프의 계급적 기반은 미국의 “룸펜 자본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과 달리 주로 미국 국내 시장에서 영업하는 자본가들이다. 지난해 중반에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25퍼센트가 요양병원에서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 요양병원 체인 기업이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 세력이었다.

1월 6일 의사당을 습격했던 무리들도 대체로는 유복한 전문직들이었다. 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의 40퍼센트는 기업 경영주이거나 화이트칼라 노동자였고, 60퍼센트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탈세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은 텍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개인 소유 비행기를 타고 시위에 참가했다.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것은 수동적 지지이고 상대 후보가 너무 별볼일없는 등의 매개 요소들이 많이 작용한다. 트럼프가 많은 표를 얻은 것은 경계할 일이지만, 수동적 투표 행위와 능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회세력에 기반을 두고 반트럼프주의 운동(그리고 반파시즘 운동)을 구축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 보트. 유럽 지배자들의 인종 차별과 난민 정책은 우파의 기세를 높여 왔다



세계 노동자 연대 운동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범죄조직 운영 유죄판결을 환영하는 반파시스트 시위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트럼프와 보우소나루 등의 집권은 그 나라 국민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올해 4월 한국의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다. 그러나 이는 유권자들이 우경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가 굴절되게 표현된 결과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가 집권한 것도 그 사회가 우경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트럼프 집권 직후에 성차별에 반대하는 대중적 시위가 벌어졌고, 2020년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트럼프와 보우소나루는 전임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에 반사이익을 얻어 집권했다.

이 선거 결과들을 두고 그 사회의 우경화를 말하는 견해들에는 흔히 우파나 극우에 반대해 중도파와 좌파가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은근히 깔려 있다. 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중도파 정부를 위태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현재 안타깝게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대체로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세월호 운동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밝아 온 궤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방식은 운동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중도파나 심지어는 진보파라고도 오해되는 한국

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계급 기반으로 보자면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다.

극우의 성장과 집권이 그 사회 전반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성공으로 말미암아 극우가 오른쪽으로 더 급진화하고 공식정치체의 지형이 더 우경화하면서 진정한 파시즘이 성장하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는 극우의 성장에 경계하며 그에 맞설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운동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도파와의 단결 추구는 나쁜 효과를 낼 것이다.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극우와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가 주장한 공동전선이다. 극우와 파시즘에 맞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서구의 극우가 인종 차별과 이슬람혐오를 주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서구에서는 그에 맞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며 대중의 삶을 파괴해 극우와 파시즘이 성장할 토양을 마련해 온 중도파와는 단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도파와 연계하는 것이 선거에서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도(심지어 입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계급투쟁을 활성화하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둘째는 혁명적 좌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좌파 개혁주의의 성장과 실패 경험에서 배우자는 것이다. 선거와 투쟁의 관계 문제다. 모든 선거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선거적 노력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는 것에 종속돼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른바 ‘정치’로 대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하면서 노동계급 운동이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좌파가 있어야 공동전선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갈수록 혁명적 좌파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좌파가 꽤 강력한데도 파시즘이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황의 불가피성보다는 좌파의 주관적 약점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는 프랑스 좌파들의 종파적 태도와 공동전선 전통의 부재다. 예를 들어, 2009년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창당은 큰 성공을 거뒀다. NPA는 혁명적 좌파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이 중심이 돼, 활동적인 반자본주의자들을 끌어들이며 탄생했다. 기존에 LCR의 당원이 2000명이었는데, 반자본주의신당의 창당대회 때 당원은 9000명이었다.

한편, 사회당에서 좌파적으로 이탈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자 장뤽 멜랑송과 공산당이 중심이 된 좌파전선도

비슷한 시기에 성장하고 있었다. 좌파전선의 정치는 전제로 보아 좌파적 개혁주의였다. NPA는 좌파전선과의 협력이나 공동 활동을 거부했다. 사회당 정부의 긴축과 마린 르펜의 성장에 맞서 공동으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NPA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적 대응의 중요성을 필요보다 과하게 설정했고,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하자 사기가 떨어졌다. 대신 멜랑송의 선거 성적이 더 좋게 나오자, NPA의 지도적 당원 일부가 탈당하고 멜랑송에게 향하는 등 분열을 겪으며 지금은 상당히 약화돼 있다.

그밖에도 프랑스 좌파와 노동조합들은 노동절 집회도 따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하다.

둘째는 이슬람혐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법률로 금지하는 인종차별적 공격을 할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슬람혐오가 인종차별의 일종이고 이에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은 결과인데, 이는 세속주의(라이시테)와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작용한 결과였다. 그래도 소수이지만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는 혁명적 좌파가 있다.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양효영

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영화를 거부해 왔다. 정대연 기자는 최근 파업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상담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을 화두로 삼았다.

정대연 기자는 이런 반대 여론이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정규직들이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묘사한다. 그래서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데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야 하며, 개별 사업장을 넘어 구조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책임의 소재

그러나 정대연 기자는 잘못된 전제와 주장에 근거해 있고, 그 대안(사회적 대화)도 결국 비정규직에게 이롭지 않다.

우선, 정규직 ‘기득권’이 노동자의 단결과 상향 평준화에 진정한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사용자들의 책임을 흐리고 면제해 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상담원들의 직접고용을 외면하는 주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공단 측이다.

특히,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다른 4대보험 공단 고객센터와 달리 민간위탁(3단계 전환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포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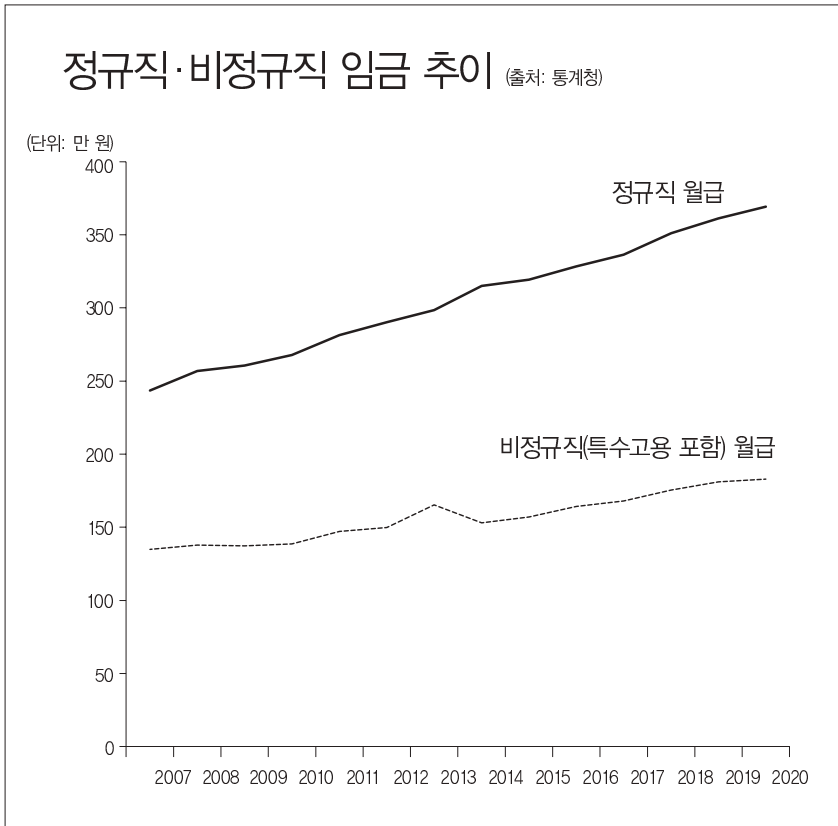
애초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은 거의 투여하지 않고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건강보험공단 측도 더 손쉽게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그간 처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를 탓하게 유도해 온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른가?

정대연 기자는 건보공단 사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쪼개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 준다”며 정규직 기득권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 안정과 연공급을 적용받는 게 상담사들의 꿈이다. 하지만 정규직은 여기에 냉담하다 못해 내놓고 반대한다. 자신의 ‘파이’(기득권)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대연 기자가 받아들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은 한편에는 고



비록 격차가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함께 등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용 안정, 고임금, 승진 등을 누리는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고용 불안, 저임금, 승진 기회가 없는 노동시장이 존재함을 가정한다. 이런 가정의 함의는 서로 다른 노동조건 속에 놓인 노동자들은 단결하기 어렵다(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노동조건이 돼야만 단결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상향 평준화로는 왜 단결할 수 없다는 말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자들의 진부한 대답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어 보수적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것은 정대연 기자의 관점이다. 그런 관점은 사용자의 양보 능력 또는 의지 결여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건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방식은 기계적이지 않고, 경제 상황과 단결된 투쟁, 그리고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일반으로 말해,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비교적 잘 조직된 부문이 조건 개선을 쟁취하면 나머지 부문 노동자에게도 상승 효과가 있다. 가령 완성차 기업 정규직들의 임금 협상 결과가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가이드라인이 돼 온 경험이나 이런 역할을 잘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은 업황에 속한 정규직 노동자의 조건이 공격받으면,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도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는다. 그때, 정규직 노동조건이 후퇴하면 비정규직의 차별 반대 요구의 기준점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

지난 수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함께 등락해 왔다. 특히,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위기가 결합된 지난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임금이

감소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6.6퍼센트 감소했고 비정규직도 3.0퍼센트 줄었다(5월 25일 고용노동부).

자본은 착취 대상인 노동자 모두를 공격할 전략에 따라 전술을 조정해 왔지, 정규직은 보호하고 비정규직에게는 고통을 주는 전략을 추구해 오지 않았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이간질해 왔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분절돼 있다는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들이면, 사용자들의 공세에 노동자들이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잘 조직된 부문이 전술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자신의 노동조건을 지키면서 비정규직에 연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조직된 부문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정규직 노조 지도부)이 자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나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보수층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운동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흔히 경제주의와 부문주의로 노동계급 연대를 훼손하는 잘못된 방침을 취하기도 했다.

조건 하락의 불안을 느끼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설득해 단결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기 보다는, 파이가 제한돼 있다(제로섬)고 느끼며 부문주의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영향을 종종 끼쳐 왔다.

그런 나쁜 효과의 하나가, 후진적 일부 노동자가 ‘공정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개인주의적 목소리를 담당히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잠재력이 있다. 건강보험 상담원 노동자들은 지난 2월 파업에 나섰는데, 그때 일

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응원했다. 당시 파업 기간에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잘 조직된 혁명가들의 조직 여부를 논외로 치면,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당시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지부장도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전화방’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상담 일을 하였던 [정규직]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고객센터가] ‘우리 업무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정규직노조 지도부와 기층 노동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정규직이 모두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뭉치게 하기도 하지만 분열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 사이의 근본적 이해관계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서로 다른 처지에 있더라도 노동자들은 잉여노동을 착취당한다는 공통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사용자들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단결할 잠재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잠재력을 과연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이다.(이 글 말미에서 언급할 것이다.)

도덕주의

한편, 정대연 기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민간 노동시장과의 “격차”를 넓힐 수 있다며 반대한다.

노동계급의 내부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조건 방어를 쟁취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노동자들의 투항(양보라는 이름의)만이 답이라는 설교의 귀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당신들도 누군가에 대해 기득권자인 셈’이라고 함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계급 일부의 조건 개선이 다른 부문의 악조건을 방치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비정규직의 조건 개선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논리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에게는 이윤이 도덕이다.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한다고 그들이 그것을 비정규직에게 넘겨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정규직 양보론은 이런 냉정한 계급 ‘도덕’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박한 도덕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소박하고 공상적인 도덕은 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히 ‘사회적 대화’라는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결여 때문이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사회적 대화?

정대연 기자는 민주노총이 “투쟁 고수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 형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 경험은 결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이롭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경사노위와 노사정합의 참가 논란 때도 정부와 진자본주의 언론은 민주노총이 취약 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가 거둬 테이블에 꺼내놓은 것은 비정규직, 미조직, 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개악안이었다.

그런데 정대연 기자가 비판하는 건보공단 정규직노조 전 위원장이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거기서 이뤄진 노사정 잠정합의안(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을 적극 찬성한 장본인이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이런 사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보론이 비정규직의 투쟁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님을 시사한다.

게다가 레임덕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사면설을 흘리며 기업인들에게 아부하고 있다. 노동계 지도부들에게 기후변화와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강조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지도부들을 포섭할 새로운 의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분위기 조성은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제동을 거는 구실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많은 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그간 참았던 조건 악화를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로 강력하게 싸우지 않으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좋은 조직은 택배, 건강보험 상담원 등이 파업에 나서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투쟁을 지지·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리한 대화라는 공상을 버리고 말이다.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강화하는 속에서만 노동자들의 연대도 되살아나고 확대될 수 있다. 투쟁에 나섰을 때 노동자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얻고, 노동계급의 힘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이에 맞선 단결과 연대가 사회적으로 필수적임도 배울 수 있다.

노동조합 상급 지도부의 경제주의와 부문주의를 극복하려면, 현장에서 그런 보수적 사상과 관행에 맞서 싸우며 기층 노동자의 의식과 단결, 급진성을 고무할 진정한 좌파적 정치가 필수적이다.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6월 9일 조합원 92.3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사와 정부가 분류 인력 충원을 1년 유예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100여 명(전체 조합원은 6500여 명)이 파업을 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7일부터 시작한 분류 작업 거부 행동을 이어 나간다.

지난 1월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는 분류 작업이 택배 회사의 책임이란 점을 명시하고 택배 분류 인력을 충원한다는 합의(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1차 합의)를 했다. 그리고 우선 분류 인력 6500명 투입을 약속했다. 이후 5월 말까지 2차 합의를 통해, 추가 인력 투입, 장시간 근무 해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택배사들이 약속 이행을 미루면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사의 그림자 속에서 일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6월 2~3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택배회사 소속 노동자의 84.7퍼센트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설문 참여한 전국 72개 우체국 소속 택배 노동자들도 모두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중 62곳에는 분류 인력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고,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민간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충원 비용을 핑계로 지난 4월에 택배 요금을 150~250원가량 인상한 바 있다. 그레 놓고 정작 인력 충원은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은



몇 달 전 약속조차 안 지키는 사측과 정부에 본패를 보여 줘야 6월 9일 서울북한물류센터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 결의대회

요금 인상으로 올해 수입이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택배노조). 그런데 CJ대한통운은 지금까지 고작 4000명만 충원했다고 밝혔다. 분류 인력 1000명당 인건비가 연간 120억 원 정도(택배업계 예측)라고 하니, 인건비를 훨씬 뛰어넘는 추가 이윤을 거두는 셈이다.

택배사들이 약속 이행을 미루는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시설확장과 설비 자동화에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비 자동화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인력 충원을 미루고, 그동안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택배사들의 약속 위반은 정부가 든든한 뒷배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정부도 (단계적 인력 충원 규모와 적용 시기에서 택배사와 차이가 있을 뿐) 과로사 방지 대책의 전면 시

행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주 60시간 정도로 하고, 주 5일제 시행 여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쌓여온 불만

7일부터 시작된 택배노조의 분류 작업 거부로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자, 택배사들은 서둘러 분류 인력을 일부 충원했고, 우정사업본부도 분류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밤 먹듯 약속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택배사들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6월 9일 울산 파업 출정식에서 만난 롯데택배 노동자는 이번 투쟁의 의의를 이렇게 밝혔다.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사측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물량은 계속 증가할 텐데, 이번에 분류 인력을 제대로 확충해

야 합니다. 특히 택배노조 조합원이 없는 곳들은 분류 인력이 거의 충원되지 않았는데, 이번 투쟁으로 이런 곳들도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분류 인력 충원과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수료(임금)는 한 톨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차량 기름값을 비롯해 물가는 상당히 올랐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김상용 택배노조 한진경기광주지회장)

파업이 시작되자 보수 경제지들은 “신의 직장 만들자는 거냐”며 과로 근절과 처우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러나 각종 비용을 제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평균 234만 원에 불과하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말뿐인 합의’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에 나서자 사용자들은 대체인력 투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에게 택배 배달을 떠넘기며 대체인력 구실을 강요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과 분류 작업 거부 동참율이 높아 배송 차질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편지 등 우편물보다 택배 배달을 우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집배원 역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다.

민간 택배사들도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거나 직영 택배 기사들을 투입해 배송 차질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노동자들의 투지는 꽤 강하다. 이번에는 ‘말뿐인 합의’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결국 약속 이행과 과로사 근절 대책을 강제하려면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관건이다.

지난 1월의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충원을 미적거렸지만, 당시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직전까지 가 일부나마 이행하게 한 바 있다. 일부 터미널에서는 1차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현장 투쟁을 벌여 분류 인력을 받아 내기도 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보여 준 이런 투쟁 잠재력을 이번 투쟁에서 적극 발휘해야 실질적인 조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지 여론도 나쁘지 않다.

다시 시작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맡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콜센터 업무도 분담해 왔다. 최근에는 백신 예약 상담도

수행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콜 수 실적 압박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해 상담원 10명 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다.

이미 4대 사회보험 고객센터 중 건강보험공단만 제외하고 모두 직영화된 상황이다.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도 직영화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 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주간 파업했다. 그러나 사측은 끝내 직영화 거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조가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를 기대하며 파업을 종료했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2월 파업 종료 후 고객센터 노조가 직영화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며 직영화 대상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게다가 사측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당사자 참가를 보장하라는 고객센터 노조의 요구조차 거부했다. 정규직 노조와 공동 참여할 때만 협의

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핑계를 대며 고객센터 노조를 배제한 것이다.

6월 8일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사측은 정규직 노조가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며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직접고용 거부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면서도 외주화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왔다. 이를 바로잡자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를 핑계 삼는 것은 비열하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나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불공정한 요구가 아니다. 고객센터 업무는 2006년 외주화 이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기도 하다. 숙련된 상담 업무로 이미 건보공단의 핵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입사 시험만이 공정한 것이라고 들이대는 것도 옳지 않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을 내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기주의로 매도되기 쉬워져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건보 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를 즉각 직접고용 해야 한다.